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과 국제이해교육으로*

한건수 · 한경구**

요약

세계화와 국제이주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인적구성을 변화시켜 다민족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있다. 정부나 시민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영역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다문화교육을 포함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투입되는 예산이나 노력에 비해 정책의 내용이나 추진체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은 다문화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의 요지는 첫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다문화정책은 문화개념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상당한 개념 혼란 속에 전개되었으며, 둘째,

* 이 글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UNESCO APCEIU)과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의 요청으로 2011년 5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포럼 “한국적 다문화주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서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국제이해교육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은 공동 저자들의 기존 연구 내용(한건수 2007, 2009a, 한경구 2007a, 2007b, 한경구·한건수 2007, G. Han 2007, K. Han 2007)을 종합하여 보완한 것으로 내용별로 인용표기를 했지만 논지가 중복되는 곳도 있다.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yoruba@kangwon.ac.kr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hanthro@snu.ac.kr

최근 유럽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 비판과 포기 선언이 한국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정책에서 문화와 개인 간의 관계를 재고해야 하며, 특히 ‘문화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문화 내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넷째,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간 이해, 세계화,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이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이라는 점이다.

주제어 :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

I. 서론

이 글은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다문화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럽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주의 비판이나 다문화정책 포기가 한국 사회에 함의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에 관한 한국 사회의 ‘열풍’은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정치적으로 옳은(politically correct)’ 관점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교육부분에서도 ‘다문화교육’의 이름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국제이주의 확산과 심화로 촉발된 한국의 ‘다문화 열풍’이 교육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을 어떻게 모색해 나가야 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이해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재고함으로써 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7년 6월 한국사회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저자 두 사람의 공동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공동작업의 1차 결과는 보고서(한경구, 한건수, 2007)로 발표되었고 이후 수정 보완되어 학술지 논문(G. Han, 2007; K. Han, 2007)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한국이민학회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저자들은 기존에 제기한 의제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왔고, 논의를 심화시켜 단행본 수록 논문(한건수, 2007; 한경구, 2007a)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글 역시 기존의 논의 위에서 국제이해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확장시킨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다문화정책은 문화 개념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상당한 개념 혼란 속에 전개되었다. ‘관주도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위 ‘다문화주의 열풍’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오해나 과도한 기대, 준비가 부족한 ‘다문화’ 정책의 성급한 추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그리고 국제결혼 가족(‘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편중성(차운경, 2008), 다민족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망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한건수, 2007, 2009a; 황정미, 2010). 이 글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넘어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의 개념을 분석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최근 유럽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 비판과 포기 선언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은 물론 이민자 집단의 비타협적 태도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비판이 한국사회에 갖는 함의를 논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주로 문화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특히 ‘문화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문화 내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넷째, 국제이해교육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가를 최근 국방부가 군 입대 선서를 ‘국가와 민족의 수호’에서 ‘국가와 국민의 수호’로 수정한 것에 주목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군 입대와 관련하여 군 장병 일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주장할 것이다. 문화 간 이해, 세계화,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을 차별과 배제의 잠재적 가해자인 선주민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II.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이주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사회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한국사회는 이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성원이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귀환할 ‘손님노동자’라는 교체순환원칙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고통에 주목한 시민사회가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도’라

며 비판했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비판에 부분적으로 대응하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수동적으로 해결해 오던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며 중요한 정책의제로 삼게 된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급증과 이들이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참여정부가 정부 조직에 도입한 각종 위원회들이 시민사회 활동가와 학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면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정부가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정책의 적극적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한국계 미식축구 선수인 하인스 워드(Hines Ward)의 방한을 계기로 언론에서도 다문화 특집 기사를 양산하며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초 변화는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었고,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재중한인, 소위 조선족의 어려움은 이주민이 아닌 ‘동포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시민운동가와 종교계 및 학계에서 보편적 인권 개념이나 평등 개념에 입각하여 이주민 전체를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며, 다문화주의의 이상과 관점을 한국사회에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 제안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점진적으로 향상된 인권 의식과, 민족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에 주목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 그리고 민족주의와 파시즘적 억압성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탈민족주의자들의 논의의 힘을 얻어 시민사회의 의식과 의제 형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기본적 성격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거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당연한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다문화사회 한국을 소재로 다양한 특집을 다루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와 계몽이 시작되었다(한건수, 2007; G. Han, 2007). 학계 역시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으로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문사회과학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러한 열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 한국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실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민의 규모나 그에 따른 문화 다양성 수준에 대한 차분한 고민 없이 미래의 가능성과 유추된 전망을 토대로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한건수, 2009a). 이민국가로 형성된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하여 식민 지배를 통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국민으로 수용한 유럽 국가들이 고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추진한 다문화정책이나 그 결과로 토론되어 온 다문화주의 논쟁들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핵심 가치의 하나인 ‘단일민족론’을 단지 극복할 대상으로만 간주하며, ‘단일민족론’의 해체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체계적 고민을 논의하지도 않는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도 분석하지 않고 있다. 실제 조선 왕조에서는 귀화인에 대한 대우를 놓고 고민했는데 구체적으로 군역이나 다른 조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 또한 고려나, 근대 이전 유교 지식인들은 외래 성씨의 존재를 들어가며 왕국의 다 민족적 구성 문제를 고민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

사적 사실은 현대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재구성을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한경구, 한건수, 2007; K. Han, 2007). 나아가 근대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식민지화를 겪으면서 일본의 국가와 민족과 문화에 대한 담론이 우리의 국가·민족·문화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해방 후 냉전체제하에서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를 경험하면서 남과 북에서 민족주의와 통일논의가 어떻게 경쟁적으로 전개 되었는가 등에 대한 역사적, 문화론적 성찰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미래의 가능성을 토대로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문화, 국민, 민족 개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다민족’ 사회와 ‘다문화’ 사회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이행을 분석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가능성과 한계, 기회와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적구성이 ‘다민족화’ 되고 있는 현실과 한국사회에서 문화 차이에 대한 관용과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용어의 혼용으로 같은 현상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한건수, 2009a).

정부는 2006년을 계기로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정책은 주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에 집중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이나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의 추진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처 간의 경쟁, 사업의 중복, 국가 다문화주의, ‘관 주도 다문화주의’ 등의 비판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미 이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와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김혜순, 2006; 윤인진, 2008; 한경구,

한건수 2007; 한건수, 2009a).

이러한 ‘다문화 열풍’ 속에서 한국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다. 한국은 국권의 상실과 식민지 통치, 그리고 전쟁과 분단 경험 때문에 국가와 민족과 관련하여 매우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가 가진 여러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문화주의는 한편으로는 마치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며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한건수, 2009a). 이러한 시각에서 민족주의는 낡은 것처럼 보이며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21세기에 다문화주의이야 말로 미래 한국의 비전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식민지 경험과 냉전 상황 속에서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다문화주의는 어리석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민족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다문화주의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과 국내 정치 상황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¹⁾.

물론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고민과 긴장이 내재하고 있다. 민족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도 있고, 일본처럼 공공연하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치안 문제, 테러 및 사회적 불안과의 연계, 외국인의 정치적 세력화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²⁾.

1) 분단 상황에서 민족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탈민족 혹은 다문화주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실제 북한에서는 다문화주의 논의가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망동’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사회론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설동훈(2007: 142-143)을 참조할 것.

2) 최근 인터넷에서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의 증가에 대한 비판적 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한국인의 우월한 민족적 특성이 훼손된다거나, 이

그러한 가운데에도 종래의 단일민족주의나 순혈주의는 국제적 고립이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외국인 신부가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Kim, 2007). 이주민 지원 정책을 정당화하는 방편에서 이주민의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하는 일부의 관행은 본질적으로 인종주의적 차별의 발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적 방편으로 이주민을 활용하는 단기적 대응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부담과 비용을 양산하는 잘못된 시각이다. 또한 다양성의 증진과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들도 한편으로는 국제이해의 증진과 다문화주의적 가치의 확산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존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국가가 취하는 일종의 변신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정치적 입장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나 문제에 대한 대안적 답변의 하나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이해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다민족 한국사회의 미래나 문화적 전망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의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다문화 열풍은 곧 한국사회의 위

슬람권 이주민의 증가로 테러 및 사회적 불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인종차별적 요소가 강해 문제가 많으나, 외국인 조직범죄의 증가나 종교 갈등에 대한 우려와 같은 진지한 논의들도 있다.

기를 심화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한진수, 2009a).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기 보다는 국내 빈곤 계층과의 형평 문제, 재정 부담, 사회적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다문화정책 포기 선언 등은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의제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다문화라는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I. “다문화주의 비판”을 비판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무척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최근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의 주요 국가의 정치인들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폄하와 부인이 힘을 얻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010년 10월 16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2011년 2월 5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2011년 2월 9일) 등이 각각 자신의 나라에서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인정했다고 한다³⁾. 이러한 발언에 힘을 입어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3) 최현미 “사르코지도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 메르켈·캐머런 이어... 反이민자 정책과 연결 논란 소지” 문화일보 2011년 2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211010319320230040> [2011.4.20. 검색]

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헤르트 빌더스(Geert Wilders) 같은 우익 정치가가 서구문화의 우수성과 이슬람의 위협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반(反)이슬람 발언을 반복하다가 법정에서는 일까지 일어났다. 문제는 빌더스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을 때 검찰 측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 기소를 취하했었고, 이후 법원의 판단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⁴⁾. 실제 공립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에 대한 반대나 이슬람 사원의 침탐이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사원건립 반대 운동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 정치인들의 발언 내용에만 주목하다가는 자칫 이들 유럽 국가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오랫동안 성실하게 추진해왔으나 주로 이민자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자문화중심주의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실패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독일 총리는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이른바 다문화사회 건설 노력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다문화의 개념을 채택해 서로 행복하게 살자는 경향이 우리를 지배해 왔지만 이 개념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영국 총리는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젊은 무슬림들을 극단주의에 쉽게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제 과거의 실패한

4) “和 검찰 ‘극우정치인 모든 혐의 무죄’” 연합뉴스 2010년 10월 16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7%a4%eb%a5%b4%ed%8a%b8%20%eb%b9%8c%eb%8d%94%ec%8a%a4&contents_id=AKR20101016002151070
 [2011.5.24. 검색]
 “和 지방선거 최대 승자는 극우정치인 빌더스” 연합뉴스 2010년 3월 4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153316> [2011.5.24. 검색]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인들은 그동안 이민자의 정체성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정작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을 다지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⁵⁾.

유럽정치인들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이민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특히 영국 총리는 다문화주의가 무슬림들의 문화를 용인함으로써 영국에서 반(反)서방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다문화주의와 이민자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영국 총리는 그 대책으로 ‘소극적인 관용(passive tolerance)’을 폐기하고, 이를 ‘능동적·근육질 자유주의(active, muscular liberalism)’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책을 통해, 영국에 살려는 이주자들이 영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며, ‘근육질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강제결혼 등 여성차별주의를 고수하는 무슬림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전액 삭감, 모든 이주자의 영어 사용 의무화, 학교에서의 영국 문화 교육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⁶⁾.

그런데 과연 유럽 도시 내 이주민 집단거주지의 형성과 사회적 통합의 부진, 일부 극단주의자의 출현 등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 때문일까? 유럽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일부가 다문화주

5) 이지선·김향미 “조화롭게 살자더니... ‘우리의 가치가 싫으면 떠나라’”
경향신문 2011년 2월 1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52142035&code=970205 [2011년 4월 20일 검색]

6) Ibid.

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혹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이 불충분했던 탓은 아닌지 새로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국제이주의 증가는 여러 복합적 요인과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와 더욱 나은 기회를 추구하는 후진국 또는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사람들의 욕망일 것이다. 여기에 뿌리 깊은 민족적, 인종적 편견, 차별과 배제, 실업과 불황에 대한 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이민자들의 삶이 전개된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복잡한 문제와 상황을 모두 다문화주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문화정책을 포기하고 강력한 배제와 동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성급하고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다. 이는 여성의 미모에 반해서 성급하게 결혼했던 남성이 얼마 후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면서 역시 조건을 따져야 한다는 중매결혼 예찬자로 갑자기 변신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자본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의 착취와 편견과 차별과 배제로 인한 갈등과 증오와 불신의 구조를 단 몇 십 년간의 다문화정책으로 해소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다문화주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가 윤리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인 것처럼 더불어 살기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IV.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으로:

문화의 자유, 문화로부터의 자유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철학적 기반, 정의, 정책 등에 대한 합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국의 정책적 원칙을 분류하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다원사회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철학적 배경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동일한 용어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전지구화의 진전이나 소위 ‘이주의 시대’의 도래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흔히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양성이란 개인들로 이루어진 인간 집단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민국가가 국내적으로 문화적 통합과 동질성을 강조했기 때문인지 다문화주의 논의는 다양한 집단들 및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존재에서 기인한 다양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다양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내적 다양성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을 주축으로 형성된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다. 오히려 개별 사회들이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해당 사회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 하겠다. 다문화주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다문화주의가 입각하고 있는 낡은 문화 개념의 가정을 살펴보자.

첫째,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단위나 주체가 하나의 사회 내지는 사회집단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사회나 집단은 오직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소위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단위나 그 주체는 대개 국민국가이며 이민자들 역시 출신 국가의 국민의 일부로서 그 국가의 문화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민자 개개인은 각기 다양한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나 규범을 선택하거나 내면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깊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 집단의 내적 다양성 역시 중시되거나 기대되지 않고 있다 (한건수 2007, 한경구 2007b).

둘째, 다문화주의는 개인은 오직 하나의 사회나 집단에 속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다수의 또는 중층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질 가능성은 크게 중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대사회의 개인은 다양한 집단 또한 다수의 문화적 전통에 노출되어 있으며 복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한건수 2007, 한경구 2007b).

이러한 낡은 문화 개념의 가정들은 상당 부분 문화인류학의 책임이기도 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생각한 소규모 사회를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인류학에서 발전시킨 개념과 방법론이 2차 대전 기간 중 국민성 연구 등을 거치면서 국민국가나 대규모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낡은 견해가 지속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국가의

문화가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가 검토했던 다른 소규모 사회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관용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순응(conformity)을 요구하며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응징한다. 루스 베네딕트는 오래전에 문화의 이러한 억압적 성격을 정상(normal)과 비정상(abnormal)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다문화주의는 자칫하면 문화의 경계를 강고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분리주의를 조장하거나 문화적 계토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때로는 소수집단 내부의 독재를 예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는 국내의 지역문화를 재발견하는 등 내적인 이국취향을 통해 과거를 되살리거나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하기도 하며 외국의 요리나 음악, 패션 등의 소비로도 나타난다. 마르티니엘로는 이를 ‘온건한(soft) 다문화주의’ 또는 ‘가벼운(light) 다문화주의’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온건한 다문화주의 내에 존재하는 피상적 다원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정체성 개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논의를 ‘강경한(hard) 다문화주의’라 부르고 있다. 한편 단지 상품의 판매나 이윤의 획득에 도움이 되거나 노동자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기업 등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시장 다문화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마르티니엘로, 2002).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는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19세기적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국가나 민족의 강력한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일문화 또는 단일민족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그 수가 채 10%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다문화주의와 종종 혼동되는 개념으로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라는 개념이 있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던 개념이다. 이는 여러 집단이 그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는 단지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의 문화가 지배적 문화에서도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사회에서 강조되던 동화(assimilation) 모델과 관련이 있다(마르티니엘로, 2002).

문화 동화(cultural assimilation)는 일방적 동화와 자발적 동화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이민자 집단 또는 소수집단의 시각에서는 이는 문화탈락(deculturation)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는 이유가 가난이건, 기아이건, 정치적 박해이건, 종교적 박해이건 어쨌든 이들은 미국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여겼으므로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이나 동화는 자발적이며 당연한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미국은 유럽에 대해 스스로를 ‘신세계’(New World) 또는 ‘신천지’라고 규정하는 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마르티니엘로, 2002).

이렇게 미국의 문화 동화는 자발성을 의제(擬制)하고 있다. 즉 이주민들은 미국에서의 삶, 즉 미국적 삶을 선택하여 온 것이므로 동화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간주되었다. 또한 미국의 기본적 삶의 가치와 목적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강요가 필요 없으며 동화 과정은 민주적이라고 간주되었고 문화접변의 일방성은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자발성의 의제는 미국으로의 이주가 자유롭지 않으며

미국적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또한 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그 때문에 상당수의 이민자가 불법으로 이주하여 차별과 착취와 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미국의 외교, 군사, 경제 정책이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가치나 이상을 배신하고 있다는 비난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유럽계 이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강제로 이주가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미국의 흑인, 그리고 멕시코와의 전쟁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든 히스패닉계, 그리고 백인의 이주 이전에 미대륙에 살고 있던 토착민 등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아시아계 이민 또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본국과의 관계도 상이하다.

이렇게 자발성을 의제하고 있는 문화다원주의의 동화 모델도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나 프랑스로 대표되는 통합주의의 기본적 태도란 공적인 영역에서는 수용국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야 하며, 고유의 문화는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서만 그 유지가 허용된다고 한다(마르티니엘로, 2002). 즉, 이주자가 공적인 영역에서 미국사회의 법규와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사회의 삶에 참여하는 한,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가 그리 명확하거나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이주를 통한 다른 문화 또는 다른 사회에서의 거주는 매우 흥미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이민자들은 단지 경제적 이유

에서 이주를 하지만 상당수 이민자들은 이주 전후에 자신들의 전통 문화나 사회 규범과 가치 가운데 특정부분을 버리거나 수정하려는 강력한 욕구와 함께 민족적 유산(ethnic heritage)을 후세에까지 보존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된다. 즉 반대감정 병존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이 이주한 지역의 문화의 역상(逆像)으로서 이민자의 민족적 전통이나 유산이 창출(invent)되거나 이상화되거나 화석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이민 2세나 여성 등은 출신국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억압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1970년대에 한국을 떠난 재미한인의 경우 자녀들에게 1970년대의 행동 규범을 전통문화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여러 요인 때문에 중층적 아이덴티티와 함께 매우 복잡한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거나 부인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이나 이웃,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이민자의 지위는 물론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르게 전개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민족전통과 문화의 보존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를 선택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었으며 자신의 사회나 문화는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대체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문화가 매우 억압적이라 생각하며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변화나 탈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아무리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불

평등과 차별과 억압과 착취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화가 불완전하며 내부적으로 모순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특정한 문화적 관행이란 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당연히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한 문화적 관행은 해당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물론 그 문화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보편적 가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히잡이나 여성 할례를 문화다양성이나 문화상대주의를 근거로 정당화하는 것을 무조건 당연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류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는 개별 문화의 특정한 관행의 보존이 항상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상대주의는 문화를 자신의 문화의 기준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 이해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문화 또는 모든 문화의 관습들이 똑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가치 상대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한경구, 2007b).

문화상대주의나 문화 다양성 선언은 지구상의 수많은 문화와 인간 집단이 제국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식민지배 때문에 파괴되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 대처하려는 뒤늦은 노력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한 사회 또는 사회집단의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지 또한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전통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문화적 관행의 존속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그러한 관행의 존재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그러한 상황에 몰아넣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경구, 2007b).

문화다양성의 보존이나 다문화주의는 한편으로는 소수자의 문화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을 문화의 구성원으로서만 파악하면서 문화를 실재하는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문화 간의 경계를 고착화시키거나 심지어는 민족집단(ethnic group)을 계층에 고정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국제 이주와 관련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은 이민자 집단이 수용국 사회와 다른 문화를 유지할 자유, 즉 문화의 자유에 집중하고 있을 뿐, 문화로부터의 자유, 즉 자신의 문화의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거부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날 자유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통(通)문화적 능력(cross-cultural competence)을 함양하기보다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 동화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보다 시급한 것은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이다(한경구, 2008).

V. 왜 국제이해교육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주의는 문화를 집단에 귀속되는 고정적 실체로 간주하며 집단 내의 모든 개인을 문화의 동질적 담지자로 간주하는 문제가 있다. 즉 전통적 문화개념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이주의 증가로 다원화되는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 만들어 나가며 또한 누려야 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개인의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국가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실천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인종차별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민권운동의 맥을 잇고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실천적 내용 역시 인종차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현덕, 2007).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한국사회 전체의 과제로서 실천적 과제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교육에 치중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이처럼 모호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역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도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교육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들의 ‘다문화’로 호명되면서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다(한건수, 2009b).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의 실태를 인권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상당수 학교

에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교사들에 의해 ‘다문화’로 호칭되고 분류되며 이들의 자율적 의사나 학습능력과 상관없이 획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동원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윤희원 외, 2008).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전지구화로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문화 상황을 분석하거나 교육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로 판단된다. 즉 다문화교육을 넘어서 국제이해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⁷⁾.

한국사회에 국제이해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국민들의 자민족 중심주의적 태도와 의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민족적인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과 이민자 및 그 자녀들에게 차별과 배제를 자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노력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위 ‘다문화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 아니 선주민 한국인의 차별적인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평화, 문화 간 이해, 세계화, 지속가능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이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책과 예산이 ‘다문화’ 혹은 ‘다문화교육’에 집중되다 보니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마치 조그만 성장 산업의 등장을 계

7)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발생과정과 문제의식에 대한 비교는 김현덕(2007)을 참조할 것.

기로 일자리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훈련 센터가 등장하고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 극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가는 의문이다. 특히 정부나 시민사회 모두 우리가 외국인과 더불어 산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하고 있다. 조상들의 이민정책 경험을 무시한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차별과 학대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시민 일반에 대한 “국제이해교육”에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처지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간혹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자. 얼마 전 우리 군(軍)은 장교 임관선서와 병사 입대선서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이를 '국민'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군 당국자는 '민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이유를 “다문화” 가정 출신을 배제하기 때문에, 또한 군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순혈(純血)민족주의라는 허상을 부인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한경구, 2011), ‘민족’이란 표현을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종족(種族)’에 불과한 의미로 해석한 것 같아 논란이 우려된다.

이러한 해석을 밀고 나가면 현행 헌법 69조도 문제가 된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에 즈음하여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민족적 구성의 다양화”를 경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맞이한 것은 아니다. 보다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민족 문화를 버리

러는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는 것 같다(한경구, 2011). 민족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군가만 보더라도 민족이나 겨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무척 많다. 차라리 헌법을 수호한다고 고쳤더라면 더 좋겠다는 느낌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임관선서와 입대선서를 수정한 것은 혼혈인들의 병역면제가 차별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혼혈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입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배경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들들도 본격적으로 징집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군 당국으로서야 병력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들을 입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군 복무는 “방패 하나에 투표권 하나”라는 고대 그리스의 표현이 말해주듯이 시민권을堂堂히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과 취업 기회를 심각하게 제약하며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각종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이민자 가정과 그 자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으며 교육과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입영은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엄청난 거대한 부담과 기회 박탈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한경구, 2011).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군 입영 후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게 될 차별과 편견이다. 물론 우리 군은 이민자 자녀의 입영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을 무사히 관리하기 위한 각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한다면 이민자 자녀의 징집은 많은 문제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한편 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노력이 군의 전투력 유지

나 지휘관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이민자 자녀의 본격적인 징집에 앞서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군 장병 일반에 대한 인권, 문화 간 이해 등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군의 사고 예방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한경구, 2011).

군 복무와 관련하여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기 위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군 장병 일반에 대한 교육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살아가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국민 일반에 대한 국제이해교육인 것이다. 아무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편견과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한경구, 2011).

교육학계의 다문화교육 논의에서도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은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세계시민을 육성해 내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민경, 2008; 차윤경, 2008). 이러한 논의는 다민족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가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위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VI. 맺음말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출산율의 큰 변화 없이 국제이주 현상이 지속되고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이 계속 변화할 경우, 그 동안 묻혀 있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다문화사회 담론이 정책을 주도 하고 있으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급증은 1980년대 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결혼이민 여성이 주축이 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과 노동력 관리 수준에서 정책을 집행해왔으며 한국사회는 이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시민운동가, 종교계, 학계 등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다문화주의의 이상과 개념이 도입되어 점차 확산되었는데, 2006년에 결혼이민자 종합지원대책이 등장하면서 부터는 다문화사회 담론이 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

일각에서 ‘국가주도’ 또는 ‘관주도’ 다문화주의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우리사회의 소위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충분한 의견 표명이나 토론 없이 또한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가치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실은 상당한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다민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문화사회는 다민족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전망의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져있지 않다면,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어떠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단일민족이라는 ‘순혈 신화’가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종종 지목되고 있으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명론적 시각에 입각한 한국민족·문화 우월주의일 것이다(한경구, 한건수, 2007).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는 민족 차별과 성 차별, 그리고 계급·계층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힌 문제인 동시에 근대화 과정에서 경험한 식민지화와 전쟁 때문에 민족과 국가의 위계도 깊이 얹혀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상당수 이주민들은 빈곤에 따른 차별과 배제, 차별과 배제에 따른 빈곤, 교육 과정에서의 차별과 배제, 차별과 배제로 인한 교육 기회 박탈과 교육 미성취, 교육 기회 박탈과 교육 미성취로 인한 취업 기회의 축소와 박탈, 취업과 승진에서의 차별과 배제 및 취업 기회 박탈과 축소로 인한 빈곤 등 피차별 소수자 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편견과 차별과 배제의 구조 때문에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쉽게 일탈행위나 분노, 좌절 등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처럼 공공연하게 표출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치안 문제, 테러 및 사회적 불안과의 연계, 외국인의 정치적 세력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다문화 담론은 보편적 가치나 인권보다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획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내 빈곤 계층과의 형평 문제, 재정 부담, 사회적 부담이 문제시될 경우에는 반발과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사회가 이주민들에게 낯설듯이 다민족 사회는 한국인에게 낯설고 새로운 현상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면서 다민족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민국가에 대한 장기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익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법적·제도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주민 가운데 경찰관,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이주민 및 그 자녀를 적극 임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은행 및 대기업 등 민간의 노력도 중요하며 좋은 역할 모델의 등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데,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실질적으로는 동화교육으로서 이주민 및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이주민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 일반에 대한 국제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이주자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이주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를 보다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주자 문제는 ‘이주자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이주자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현덕(2007).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비교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4), 1-23.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편,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통합**. 서울: 한국사회학회.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 설동훈(2007).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인문연구**. 5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5-160.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72-103.
- 윤희원, 박윤경, 김경량(2008). **인권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민경(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방향성 고찰: 서구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2). 교육사회학연구회. 83-104.
- 차운경(2008).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교육모델로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연구**. 1(1). 다문화교육학회. 1-23.
- 한건수(2003). 우리는 누구인가?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서울: 일조각.
- 한건수(2007). 비판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다문화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서울: 동녘.
- 한건수(2009a). 한국 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 열풍’의 위기. **지식의 지평**. 7호. 한국학술협의회. 192-208.
- 한건수(2009b). **다문화교육의 실태와 국제이해교육**. 서울: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한건수, 설동훈 (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경구(2007a). 다문화 사회란 무엇인가? **다문화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서울: 동녘.
- 한경구(2007b). 문화다양성과 동아시아 민족주의. **사회과학연구**. 제20집.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경구(2008) 다문화사회의 문화교육: 통문화적 능력 배양과 일반적 적응. **사회과학연구**. 제21집.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경구, 한건수(2007). 다문화 사회 개념과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에 대한 성

찰: 단일민족국가의 자승자박/환골탈태? 한국사회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황정미(2010).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담론**201 13(2). 한국사회역사학회. 93-123.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지음, 한경구 외 옮김(2006). **국경을 넘는 방법: 문화, 문명, 국민국가(国境の越え方)**. 서울: 일조각

마르티니엘로 마르코 (Mrtiniello, Marco) 지음, 윤진 옮김(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Han, Geon-Soo(2007) "Multicultural Korea: Celebration or Challenge of Multiethnic Shift in Contemporary Korea?". *Korea Journal*. 47(4). 32-63.

Han, Kyung-Koo(2007) "The Archaeology of the Ethnically Homogeneous Nation-State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Korea Journal*. 47(4). 8-31.

Kim, Hyun Mee(2007) "The State and Migrant Women: Diverging Hopes in the Mak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temporary Korea". *Korea Journal*. 47(4). 101-122.

<신문기사>

연합뉴스. 2010. 10. 16일자.

연합뉴스. 2010. 3. 4일자.

경향신문. 2011. 2. 16일자.

문화일보. 2011. 2. 11일자.

조선일보. 2011. 4. 26일자.

Abstract

Going Beyond Multiculturalism to the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Han, Geon-So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n, Kyung-Koo

(Seoul National University)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have transformed Korean society to the multiethnic society.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education have emerged as the solution for the possible challenge of multiethnic Korea. This paper analyzes multicultural discourse, policies and education programs with following points.

First,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a chaotic confusion of key concepts of multiculturalism as a result of the lack of deep reflection. Secon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understanding of European policy changes of multiculturalism and the pronouncement of withdrawing multicultural policies. Third, based on thes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culture and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diversity within a culture’ rather than ‘diversity among cultures,’ although it is also important. Lastly, this paper suggests EIU as the complementary educational alternative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The main argument is that we need to implement

EIU in a serious manner that embraces inter-cultural understanding, globalization,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general Koreans who are potential aggressors of discrimination and isolation.

Key words :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Societ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투고신청일 : 2011. 05. 15

심사수정일 : 2011. 06. 16

게재확정일 : 2011. 06. 20